“상생과 공존의 ‘광주형 일자리’ 이제 시작”

‘광주형 일자리’로 현대차 투자 이끌어낸 윤장현 광주시장

세계적인 자동차 그룹인 현대자동차가 투자의향서를 보내왔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는다. 성공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 현대차 노조의 반발, 시 혈세 투자에 대한 부담감 등도 상존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형 일자리’가 지금까지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시도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동시에 지역경제의 획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높다.

‘공존’과 ‘상생’이라는 철학이 담겨 있는 ‘광주형 일자리’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기득권, 양극화, 채용 비리, 국내기업의 해외 이전, 지역청년의 탈출 러시, 암울한 지역경제 등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한 가닥 희망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향후 현대차와의 협상, 지역 내 논의 및 합의, 합작법인 및 공장 설립, 첫 자동차 생산에 이르기까지 과제는 산적해 있다. 하지만 이는 광주이기 때문에 가능했으며, 다른 지자체는 내심 부러운 속내를 감추며 광주시와 현대차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틈만 나면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희생했던 광주가 이제 잘사는 것으로 보답받고, 미래 후손들이 그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광주형 일자리’를 언급했다. 하지만 성과는 미미했으며, 기대했던 대기업의 투자도 잠잠하자 현실을 감안하지 못한 ‘이상론’이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결국 민선 6기에 대한 평가도 냉혹할 수밖에 없었다. 재선 도전을 멈춘 주요 이유이기도 했다.

막바지 현대차가 손을 내밀면서 그동안 초조하게 기다렸던 윤 시장도 비로소 웃을 수 있게 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소감은

▲초조하면서 두렵기도 했다. 금호타이어 문제를 보면서 지역 내 기업의 중요함을 실감했기 때문이다. 금타 문제가 잘 해결되지 못했다면 현대차 투자도 어려웠을 것이다. 광주 미래를 위해 이번 현대차의 투자가 좋은 결실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

-민선 6기 광주형 일자리에 올인한 이유는.

▲지역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 청년이 떠나지 않고 떠났던 청년이 되돌아오게 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취임 전부터 기업 경쟁력을 보장하는 수준의 적당한 임금과 노사 협력이 전제된다면, 기업의 새로운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고 여겼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현실화하는 것이냐였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과 지역사회가 대타협의 장에서 함께 만나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기업이나 정부 주도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방식과는 출발점 자체가 다르다. 지역사회가 투자 환경을 개선, 기업을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구조인 것이다. 단순히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임금 현실까지 살펴 이를 바로잡아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였다.

-이상론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광주형 일자리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사회의 통합을 추구하는 지역 혁신 운동이기도 하다. 따라서 다분히 철학적이며, 이상적일 수 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을 한 번 살펴보자.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일하는 정식 직원의 임금은 연평균 9700만원 선이다. 1차 협력업체 직원의 임금은 연평균 4800만원이고, 이에 반해 2차 협력업체 직원은 연평균 2800만원까지 떨어진다. 특히 비정규직 사내 하청업체 직원의 임금은 연평균 2200만원 선에 머무는 실정으로, 본사 정직원과 약 4.5배 차이가 난다. 모두에게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임금 협상 테이블에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부품 납품업체, 광주시가 같이 앉아 임금의 불평등을 극복하는 적정임금을 산출하자는 것이 핵심 개념이다. 민주·인권·평화도시인 광주에 맞는 일자리, 임금체계 등을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 대타협 전제

성공 위해 노사 양보·정부 관심 필요

적정임금 4000만원 양극화 해소 적정선

현대차 투자 결실 위해 남은 임기 최선

-적정임금을 평균 4000만원으로 책정했는데.

▲광주에는 질 좋은 일자리가 적다 보니 전체적인 임금 수준이 낮은 편이다. 80% 이상이 40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다. 노동자들의 현실적인 임금 액수와 광주지역의 주거, 식품, 교육, 의료 등 생활 전반에 이르는 지수를 참고해 산출한 액수다. 적정 임금은 투자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형성돼야 하고, 정상적인 시민 생활을 보장하는 액수여야 한다. 양자가 조화를 이루는 ‘적정’ 지점에서 긴장과 갈등은 필연적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협약이 필요한 것이다. 주거·의료·교육 등을 지원하며, 향후 합작법인의 수익이 증가하면 그에 따라 노동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실질소득 수준에서 결코 낮다고만 볼 수 없을 것이다.

-일자리가 직·간접적으로 1만2000개가 생긴다는데.

▲광주형 일자리는 1인당 근로시간이 과도하게 많은 우리나라 노동상황의 개혁도 포함돼 있다. 우리나라 연평균 근로시간은 멕시코에 이어서 세계 두 번 째로 많다. 그럼에도 노동생산성은 선진국의 60퍼센트 선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광주형 일자리에서는 근무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을 설정했다. 주간 40시간 기본 근로에 초과 근로를 12시간 이내로 할 경우, 우선 일자리가 그만큼 늘어난다. 물론 기존 노동자들의 소득이 줄어든다는 저항을 피할 수가 없지만, 여기서 인문학적인 성찰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저녁이 있는 삶과 바꾼 임금으로 인해 노동자의 삶은 향상될 수 있다고 믿는다.

-노조를 중시했는데, 현대차 노조에서 반대가 심하다.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할 수 있는 열쇠는 무엇보다도 상호 신뢰와 양보를 기반으로 하는 타협의 정신에 있다. 기업은 노사 책임경영을 구현하고 확대함으로써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동자들에게 경영의 일정 부분에 참여하도록 하고, 경영의 책임도 함께 나누도록 하는 것이다. 현대차 노조가 반대하고 있지만, 광주형 일자리가 사회적 협약에 기반을 두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지 이미 형성된 임금에 개입할 수도 없고, 개입해서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현대차와는 다른 합작법인이 노사민정과 지역의 대타협을 거쳐 임금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현대차 노조가 반대하고 나설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데.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적극 지원하고 이를 전국에 확산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많은 부분에서 현 정부의 노동정책과 방향을 같이 한다고도 할 수 있다. 다만 지난해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11조2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광주형 일자리 관련 예산은 고작 3억원만을 배정한 점은 아쉽다.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며, 중앙정부의 지원 여하에 따라 성패가 좌우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당부하고 싶다.

-지역 각계에서 현대차의 광주 투자를 환영하고 있다.

▲경총이나 상공회의소 등 지역경제계는 물론 한국노총 광주본부 등 지역 노동단체들도 좋은 소식을 전해줬다. 앞으로의 과정이 녹록치 않겠지만, 광주의 염원과 저력을 모아 대처해나가겠다. 첫 시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또 반대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올 수밖에 없다. 다만 광주를 위해 지금의 도전이 분명히 가치가 있음을 시민 모두가 알았주셨으면 한다.

-민선 6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4일이 당선된 지 4년이 되는 날이다. 시장을 권력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역할과 책임으로 봤으면 하는 바람이다. 세계, 국내의 변화를 보면서 도시의 생존을 인식하지 않으면 방향성을 제대로 잡지 못할 것이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세계사적 흐름, 다른 도시와의 경쟁 구도 등을 보면서 힘들고 더디고 어려움이 없지 않았지만 방향성은 맞다는 확신을 갖고 4년을 보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선거중립 지켜라” “정치기본권 탄압” 설전

광주시교육감 선거 막판 ‘전교조’ 변수?

정치성향·색깔론도 거론

선거 공보물, 전교조, 3선 교육감, 후보자들의 정치성향, 색깔론….

열흘도 채 남지 않은 광주시교육감 선거에서 각 후보자 캠프 측과 교육계 안팎에서 거론하는 막판 변수들은 정책이나 공약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시장, 도지사 등 단체장 선거에 가려 교육감 선거가 주목받지 못한 탓에 후보자들은 4일부터 각 가정에 배송되는 공보물이 표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사실상 후보자로 나선 이가 누구인지도 정확히 모르는 유권자들이 적지않은 탓에 ‘깜깜이 선거’로 불리는 상황에서 후보자 이름과 주요 경력, 대표 공약 등이 담긴 공보물을 보고 후보자들을 선택하는 유권자들이 상당할 것이라는 얘기다.

교원단체인 전교조도 교육감 선거의 주요 변수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다. 공사립 교사들로 구성된 교원노조여서 단체의 정치적 중립과 별개로 어떤 식으로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최영태 후보와 전교조 광주지부가 ‘선거 중립 및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두고 벌인 설전이 주목된다. 최 후보가 지난달 29일 ‘전교조 광주지부는 선거 중립 의무를 지키라’고 전교조 광주지부에 요구한 게 발단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최 후보는 ‘25일 전교조 행사에서 지부장 등 집행부 일부가 현 장휘국 후보를 지지하고 최 후보를 깎아내렸다’고 주장하며, 비교적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했다.

이에 발끈한 전교조 측은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어 “교원(전교조)들의 정치 기본권을 탄압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최 후보는 공약을 발표할 때부터 전교조 때리기에 집착했다. 광주교육의 정책과 방향을 이끌 수장을 뽑는 선거에서조차 교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가”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후 양측 모두 공세에 나서지 않으면서 전교조 ‘변수’는 가라앉은 모습이지만, 언제 수면 위로 떠올라 판을 흔드는 변수가 될지 모른다고 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지적한다.

후보자들 정치성향도 막판 떠오른 변수다. 광주·전남기자협회, 지역 방송사 주관 토론회 등에서 이정선 후보가 현 교육감인 장휘국 후보를 겨냥해 “민중당과 연계돼 있지 않으냐”며 사실상 정치성향 검증을 넘어 색깔론을 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에 맞서는 이정선, 최영태 후보들이 줄곧 거론하는 ‘3선 교육감에 대한 시민들의 거부감’이 실존하는지, 있다면 표심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다. 장휘국 후보 측은 “3선 도전에 대한 일부 시민들의 거부감이 있겠지만 지난 8년간의 성과, 광주 교육의 변화로 평가받겠다”는 입장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한-필리핀 정상회담…실질협력 강화

“문대통령 8일 사전투표…싱가포르行과는 무관”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한-필리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양 정상간 회담은 이번이 두 번째다.

양 정상은 이어 확대정상회담을 통해 교역·투자, 국방·방산, 문화·인적교류, 농업 등 각 분야에서의 양국간 실질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문 대통령은 두테르테 대통령에게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북미정상회담, 남북미 정상회담 개최 및 종전선언 등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8일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오는 8일 사전투표를 하기로 했다”며 “대통령뿐 아니라 3명의 청와대 실장을 비롯해 비서관과 행정관 등 많은 분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의 사전 투표는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김 대변인은 이어 “싱가포르(에서의 남북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와)는 무관하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정의용 국가안보실장·장하성 정책실장, 비서관과 행정관도 이에 동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이) 40%대까지 떨어지기도 하는 등 다른 선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며 “그래서 사전투표를 통해 전체투표율을 끌어올릴 필요성이 있고,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사전투표가 25%를 넘기면 프리허그 하겠다고 했던 개인적인 인연도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